

社會 발전과 大學教育

柳 初 夏

(忠北大 哲學科)

1. '90년대 社會發展의 巨視的 展望

정치·경제·과학·예술 등의 발전에 비해 '사회 발전'이라는 개념은 좀 애매한 감을 준다. '사회'란 예컨대 '영토, 문화, 인구 재생산 관계, 상호 행위의 규범적 체제와 기구 등을 공유하는 자족적 인간 집단'으로 기능주의적 방식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고, '일정한 발전 단계의 생산력에 조응하는 경제·정치·이데올로기 등 여러 수준에서의 인간 관계의 총체'라고 실천적 비판의 관점에서 규정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이나 방식에 따라 파악하든 '사회'는 정치·경제·과학·예술 등의 분야로 한정되지 않는 인간 관계 역동을 총체적·포괄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수준의 미시적 관점에서 파악된 인간 관계의 양적·구조적·질적 향상을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이다.

'90년대 韓國의 社會 發展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구성적 요인인 경제력과 경제 체제 및 정치 구조와 중심적 권력 주체가 단기적 전망으로도 매우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데올로기 수준을 포함한 각 분야 및 총체적 사회 구성의 관점에서 구조적·체계적 변혁을 지향하

는 세력이 그 단기적 한계를 접할 수 없는 획기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90년대 한국 사회의 발전은 숫자상의 지표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적 차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닌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社會主義圈의 개혁과 개방을 비롯한 세계 정세의 변화와 사회주의권과의 정치·경제적 교류 관계의 확대 및 南北 관계의 진전은 남한 사회의 변혁과 민족 재통일의 과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인 또 다른 변수 지표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90년대 한국의 사회 발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관계 역동의 전반적 방향만은 큰 착오 없이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방향은 다음의 논의에서 기술되듯이 인류사 발전의 현재적 경향과 한국 국민의 일반 의사가 결합하여 정향된 현실적 방향이자 당위적 방향이다.

사회 발전의 일차적 지표는 社會的 生産의 총량이다. 그것은 사회 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리적 욕구의 충족과 문화 가치 창조력의 발현을 위한 물적 조건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조건'은 그 자체로 '사실상의' 욕구 충족과 창조력 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처나 보살 또는 예수나 마르크스의 눈으로 보면, 동시대인이 누리는 쾌락의 평균치를 넘는 부분의 쾌락은 환상적 향유로서 거짓된 행복을 산출한다. 사회 성원의 인간적인 삶을 총체

적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 총생산의 증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적 생활의 '조건'으로 생산된 재화가 고루 분배됨으로써 환상적 향유의 총량을 줄이는 만큼 '실질적' 생활 수준은 높아진다. 사회적 생산의 分配 構造의 改革은 생산량의 증가에 못지 않는 사회 발전 지표이다. 노동 3권과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지표를 상승시키는 구체적 대안의 대표적 형태에 해당한다. 동시에 그것은 현 단계의 종속적 독점·독재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생산의욕·기술 진보·경영 합리화·과학 발전에의 길을 틔으로써 생산량과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權力 관계의 民主的 變化 또한 사회 발전의 주요 지표가 된다. 정치적 민주화는 무엇보다 국가적 의사 결정과 권력 기관의 운영에 국민 일반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고루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으로써 이루어진다. 행정부와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기술적 지식·기능에 따른 기계적 선발과 권력 기관 내부의 직무 배치로 그치지 않고 국민적 선택이 간여하는 일정한 몫의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3대 권력 기관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동등한 수준의 상대적 자립성을 지녀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 의사에 따라 적어도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각 권력 기관의 임무 수행은 국민 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형식적·절차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 내지 민족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 곧 경제적 생산 주체의 대표가 권력 기관의 담당 주체로 진출함으로써 지금껏 재벌과 군부가 주도해 온 통치 관계에서의 質的 民主性은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정권의 경쟁적 도전 집단들에 대한 법적·준법적 억압의 철폐는 '90년대 한국 사회의 발전을 표현하는 정치적 민주화의 첫 단계를 이룰 것이다.

사회 발전을 재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지표로서 이데올로기적 自由와 開放이 지적되어야 한다. 양심·학문·예술 창작 등 사상의 자유는 질

대적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출판·演行·작품 전시 등 표현의 자유는 정권 아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각 계급·계층 등 사회 집단의 이익 수호를 위한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특수 범주로 규정된다. 정치 체제·권력 구조·남북 관계·국제 관계 등에 관한 사상 이론적 대안의 제시나 그 공동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적 표현은 주권 국민 구성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정강 정책을 표방하는 진보적 핵심 정당도 정권 장악에 도전하는 정당한 합법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폐지와 출판물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열 관행의 철폐 그리고 학계·언론계·종교계의 일부 및 몇몇 대 규모 사회 단체의 어용적 대정부 관계의 청산 등은 사회 발전 지표로서의 이데올로기적 개방을 이루는 단초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수준의 국가적 사회 발전 방향은 대외적 자주·독립성의 확보와 상호 함수적으로 규정된다. 경제적 이익, 민족국가적 권위 및 자결권, 이데올로기적 주체성과 불럭 가담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은 국내 사회 관계에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과 서로를 고무·추동하는 관계에 놓인다.

2. 社會發展의 主體들과 大學教育

앞에서 서술된 사회 발전의 거시적 방향은 한마디로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간 관계에서의 구조적 평등의 실현과 그를 통한 개개인의 인간적인 삶의 양적·질적 고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발전이 '90년대 한국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는 물론 국제 정세의 역동적 조건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일정 정도 규정된다. 그러나 그 한도 속에서 또는 그 한도 자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구성 집단들의 主體的 實踐에 따라 이루어질 社會發展의 측면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어떤 측면의 사회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를 규정하는 일차적 요인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계층적 주체 집단 간의 세력 관계이다.

원 단계의 경제정치적 사회 관계에서 법제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권·정권 연대 세력이 '90년대에도 국민 일반 내지 변혁 지향 민주 연합 세력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견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금권·권력 연합은 물론 그 정당성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에 밀려왔고, 지금까지 그 국내적 억압 통치의 후원자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제적 독점 자본 세력은 이제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으로 대표되는 신 식민지적 강제를 통해 한국 민중의 경제적 생산력을 와해시키고 수용해 갈 뿐 아니라 한국 재벌의 국제 진출이나 한국 정부의 북방 외교에 대한 제동에서 보듯 금권·권력의 후원자라기보다 견제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이나 남북 대화의 진전 또한 대내적 억압과 수탈의 강화·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들 대외적 요인은 6공 권력이나 그 연대 세력의 억압적 통치를 어렵게 하는 부차적 계기 내지 조건일 뿐이다. '90년 이후 재벌이나 정권이 감수하게 될 지배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월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의 조직적 성장과 의식화이다. '90년초에 건설될 것으로 공인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지금껏 임금 인상 등을 위한 경제 투쟁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 계급이 체제 개선을 향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할 전망을 간직한 맹아일 수 있다. 전노협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일시적 성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대중의 의식화·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자·농민·지식인 등의 범민중적 연합 전선을 강화하는 효과를 산출하게 마련이다.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이 권력 경쟁의 주체 단위로 성공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민중 운동에 대한 권력의 탄압이 표면상 지속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90년대 사회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양적·구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노동 생산이 남을 위한 것 위주로 되기보다 생산 주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몫이 커질 것이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관리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가치 분배에서의 격차 또한 완화될 것이다. 성별·학력·직종·지역에 따른 계층·집단 간의 차별이나 갈등도 적어질 것이다. 일할 권리와 쉴 권리, 정권에 대한 비판과 권력 기관에의 참여의 권리, 구조 개혁·체제 개혁을 향한 실천 운동의 자유, 교육과 의료를 받을 권리, 자유 시간, 주거 공간, 문화적 향유와 오락을 위한 공공 시설, 어린이 양육을 위한 공공 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등의 많은 측면에서 量的發展과 構造的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다.

'90년대에 진행될 한국 사회의 발전은 획기적 변화에 직면하지 않는 한, 대체로 정부나 국회 등 제도적 권력 기관의 형식적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발전을 일으킨 실질적 주도력은 개혁의 정당성과 억압의 부당성을 실천적으로 표현해 나간 주권 국민 내지 그 대변 세력으로서의 민중 연합적 공동 주체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한 변혁 주체 민중 연합은 단순화시킬 때 노동자·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식화·조직화 및 사회 구조·역사 발전의 체계적 인식을 갖춘 비판적 지식인의 민중통합적 실천의 결합물이다. 단적으로 말해 노동자의 지식인적 의식화와 의식화된 지식인의 조직적 노동자화가 민중적 주체 연합의 중심 뼈대를 이룬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 및 역사 발전의 방향과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은 인간·사회·자연을 관통하는 일반 원리의 이해와 당면 현실의 중심적 구성 요인의 분석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실천적 비판에서 산출된다. 이러한 實踐的批判이 형성·확산·실현되는 대표적 전당이 大學이다. 大學敎育은 사회 변혁의 실천에 통합되는 비판적 의식의 산출 과정의 일부로서 의미 있는 역사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교육은 물론 변혁 이전의 평상적 사회 구조·사회 역동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건강한 시민 의식 내지 문화적 일반 교양의 함양을 일차적 임무로 한다. 그러나 변혁이 요구되는 역사 상황에서의 일반 교양과 시민 의식은 모순적 현실의 비판적 인식과 모순 극복의 실천 지향을 포함한다. '90년대 한국의 대학교육은 모순된 현실의 구성적 사회 집

단의 일원으로 안주하는 이기적 지식 기술자의 양성에 그칠 때,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현상 고착의 보수 또는 반동에 봉사하는 종속적 사회 현상의 하나로 위치지어질 것이다.

3. 社會發展에 상응하는 大學의 모습

대학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大學이 전 우주적 구조와 과정을 꿰뚫는 포괄적 진리의 탐구 마당 내지 ‘암의 小宇宙’라고 할 때 그것은 ‘암의 우주’일 뿐 ‘우주 자체’는 아니다. 우주라는 개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를 별개로 할 때, 의식 속의 우주와 사실상의 또는 자연으로서의 우주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 대학이 그 母社會와의 현실적 관계를 벗어나 존립할 수는 없다. '90년대 한국의 대학교육이 사회 발전의 부분을 구성하고 더욱이 그 발전의 주체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대학은 그 내부 구성 인자 간의 관계 및 외부적 사회 집단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현 단계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본 하나의 사회로서의 대학은 교수·학생·직원·총장이라는 4원 요소 또는 거기에 재단을 보탠 5원 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에 대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잘못된 선입견 하나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령 “○○대학교가 학생 3명을 제명했다”거나 “××대학교는 직선 총장을 면직시켰다”는 등의 부주의한 언어 표현에 담긴 사실 왜곡이다. 앞 문장에서의 ‘○○대학교’는 명실상부하게 ‘○○대학교 총장’을 가리키며 뒷 문장에서의 ‘××대학교’는 명목상 ‘××대학교 재단 법인’ 또는 ‘××대학교 경영자’를, 실제로는 ‘××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지칭한다. 대학 구성의 4요소 또는 5요소의 하나에 불과한 총장 또는 재단을 대학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의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은 군주를 국가와 동일시한 고대적 관점과 교회나 국가를 독립적 실체로 상정한 중세적 관점의 결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오류로만 돌릴 수 없는 실천적 왜곡을 함축한다. 자본가와 경영자 및 노동자로 성립되는 기업 내의 勞·資 간의 대립을 “△△회

사는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폐업을 신고했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왜곡함으로써 자본가를 회사와 동일시하는 사례들 또한 근대 이전의 유기체적·실체적 사회관을 반영한다. 총장이나 재단 이사장 또는 대표 이사·사장을 ‘주인’으로 그리고 교수·학생·직원 또는 사무직·생산적 노동자를 ‘부속 집단’ 내지 ‘종복’으로 보는 관점이 민주 사회에서 용인될 수는 없다.

大學社會는 교수·학생·직원을 3대 주체로 하여 성립된다. 教授는 연구(발표)와 강의 및 학생 지도를 통해 사회에 지식·기술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지식·기능을 전달하고 교양과 덕성을 키우도록 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진다. 學生은 수업과 자치 활동을 통해 기술적 지식과 인간적 덕성 및 시민적 자질을 습득·함양하는 임무를 진다. 職員은 이들 교수와 학생의 학문 전수와 인간적 성장이라는 대학 운영의 내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부차적·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으로 하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의 중심적 과제를 놓고 볼 때, 그들의 대학내 사회적 역할이나 임장이 비당사적·부차적 성격을 지닐 뿐 직원은 여전히 대학 구성의 3대 주체 요소이다. 總長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선다. 현행 제도로 보던 총장은 대학 운영을 관장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를 지니되, 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갖는 상부 기관일 뿐 교수·학생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일 수 없다. 총장은 교수 자격이 없는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전통에 비춘 한국 사회의 교직원과 최근의 민주화 추세에 따른 교수 사이에서의 직선의 관행 및 대학 구성의 이상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총장은 대학 사회의 행정 수반일 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수의 민주적 대표여야 한다. 총장은 문교 당국의 행정적 하부 기관이라기보다는 대학의 3대 주체의 총괄적 대표이자 지도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구성 주체들은 바깥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통적 임무를 당위적·현실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적

어도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은 학문적 식견과 지식인적 양심에 입각하여 전반적 사회 상황에 대해 비판적 충고와 건설적 대안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은 계층 소속 이전의 자유로운 입지와 비판적 인식 능력 및 젊은이다운 열정 그리고 봉건적 조건의 시대 이래 시대 중첩적 자본주의 사회의 원 단계에 이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현실적 특수성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라 기존의 사회 체제에 대한 개혁 지향 실천의 의미있는 한 몫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다.

社會發展에 상응하는 大學 內部 인자들 간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진다. 첫째, 학과·단과대학·종합대학의 각급 행정 단위 간의 民主的 自主·自律性과 有機的 集中性이 확보·실현되어야 한다. 하급 기관의 자율적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면서 그 의사들의 통합물인 중앙 기관의 결정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학생·직원 간의 任務 限界 및 相對的 自律性이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 재정, 강의 시간 배정, 도서관 운영, 제반 시설과 복지 시책 등에 관해 사전·사후에 알 권리와 일정한 정도까지 공동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을 학원 운영의 실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직원은 사두직·고용직 노동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러 권리를 누리고 교수와 수업이라는 대학의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일반 행정의 영역에서 대학 운영의 합리화·효율화에 기여하며 업무 추진의 자율성을 확보받아야 한다. 셋째, 대학 운영의 자율성·민주성을 보장하는 보완적 장치로서 대내적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인 教授協議會 내지 教授評議會가 구성·운동되어야 한다. 학생과 직원은 그 피교육자적 내지 보조자적 지위에 걸맞는 방식으로 사안에 따라 일정한 지분만큼 교수평의회 중심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민족적 수준의 사회 발전에 상응하는 大學社會의 對外的 관계 位相은 간섭의 최소화와 자율의 최대화로 압축된다. 정부는 국가적 수준의 정책이나 교육의 일반 목표 및 사회적 수요에 따른 교육 공급의 조절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학 운영의 어떤 측면·단계에서도 문교부나 경찰 및 정보 기관 등 권력 기구를 통한

개입·통제를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재단은 재정 이외의 대학 운영 일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한계를 지키도록 한다. 대학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용도나 수혜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정도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점들과 아울러 大學의 對外的 自主性을 확보하는 중심적인 열쇠는 교수를 중심으로 한 총장의 자율적 직접 선출, 총장 후보 자격 요건으로서의 일정 수준·기간 교수 경력의 부과 그리고 총장 재임 기간 동안의 교수 자격 유지 등을 의결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와 동시에 制度化하는 데서 찾아진다. 그럴 경우 교수대의 기구인 교수평의회가 별도의 의장에 의해 주재되는 한, 총장은 전체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회 의회장을 자동적으로 보유해도 좋다.

4. 社會發展 추동 기능으로서의 大學教育

대학 사회는 일반 사회, 곧 경제적 사회 구성체에 대해 이중적 의미에서 종속성 내지 피규정성을 지닌다. 우선 대학은 사회의 종개념적 요소 단위라는 점에서 사회에 종속된다. 바깥 사회와의 인적·물적 교호 작용을 떠난 대학이란 존립할 수 없다. 그만큼 대학은 국가 사회가 위치한 역사적 단계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의 틀에 의해 규정되고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통치 관계에서의 정치적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은 생산과 통치의 현실 관계로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떨어져 있다. 대학 구성원의 중심적 임무인 연구와 교수, 학습과 도야가 학문 이론적 진리라는 개념 체계를 전제 및 매개로 하여 수행된다. 대학인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활동은 경제적 생산의 물적 상호 작용으로부터 떨어져 이루어짐은 물론 다양한 계급·계층이나 사회 집단 간의 이해 관계의 상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과도 일단 무관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대학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또 다른 의미의 피규정성이 드러난다. 표면상 경제·정치적 사회 현상과는 별개의 영역을 이루는 대학 현상은 실은 물질적 생산 활동 및 사회정치적 활동에 따라 조건지어진 정신적 활동으로 세워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사회의 피규정적 종속 집단이라는 것은 대학의 존재 형태가 사회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사회 발전에 상응하는 대학의 모습'이란 이런 의미에서 '90년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에 조응하는 형태로 그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은 언제나 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양식 내지 경제적 사회 구성 수준의 체제적 변화는 주지하다시피 생산 양식 내지 그에 조응하는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 체계의 틀을 뚫고 올라온 경제 사회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산력의 폭발적 성장 자체도 기계적 자연 과정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목적 의식적 노동의 산물이다. 생산 양식적 변혁, 곧 혁명적 변화를 거친 새로운 역사 단계 속에서의 정치 체제·법 체계·철학·종교 등 상부 구조는 계급 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인간 관계의 형태나 생산력의 발전에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채 능동적으로 반작용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모순을 타파하는 창조적 변혁기에는 계획적·목적의식적 실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 기구인 大學도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發展的 變革 운동에 있어서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役割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大學과 大學教育이 단순히 경제적 사회 구성의 종속적·부분적 인자로서 피동적으로 조응하는 모습으로 존립할 뿐이 아니라 그것(사회)을 적극적으로 改變하는 독자성을 지닌다고 할 때, 그 개변 기능은 학문이론적·사상의식적 측면과 변혁실천적 측면의 두 길을 따라 수행되게 마련이다. 대학교육이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이 자연발생적 단계에서 경제 투쟁 노선을 견고하고 있는 변혁의 기본 동력, 곧 기층 민중에게 뚜렷한 미래상과 목적 의식을 고취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의 학술 운동의 형태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 집단을 이루는 대학인 자신이 민중적 변혁 주체의 조직적 성원으로의 실천적 자기 변모를 이루는 데에서 솟아난다. 이들 두 갈래의 힘은 실상 두 갈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의 힘으로 통합된다. 지식인 운동이 생산하는 이론으로서의 무기는 변혁의 중심 주체와의 실천적 결합을 통해 진정한 물적 무기, 곧 민중 역량으로 통합되고 그에 따라 지식인 운동은 본질적 실천 운동으로 고양된다. 무정향적 무기에 체계적 방향을 주고 자연 발생적 대중을 의식화·조직화된 주체 민중으로 고양시키는 일은 변혁 운동의 주체 역량을 실질화하는 필수적 기능이다.

大學教育이 사회 발전의 능동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 대상으로 하여금 사회역사적 수준의 인간 존재에 대한 批判的·反省的 意識을 획득하게 하는 일이다. 현 단계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볼 때 최근까지 이러한 일은 교수 집단에서 학생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운동·청년운동에 실려 확산된 실천적 비판은 유물론을 기계적 결정론으로서의 물질주의·경제주의로, 그리고 변증법을 구체적 현실 상황의 실증적 분석과는 무관한 만병통치적 자동 장치로서의 선형적 인식 틀로 보는 단순화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심지어 암시증을 속류 유물론 내지 기계론적 운명론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이론 체계로 축소·왜곡하는 이른바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이 고전 및 정통 암시증을 극복한 창조적 혁명 사상으로 각광을 받으며 남한 사회의 변혁 실천을 위한 포괄 지침으로 수용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大學教育은 이러한 혼란에 이르도록 방치한 지금까지의 無關心과 逃避 행각을 反省하고 진정 主體的인 實踐的 批判體系를 건설해야 할 責任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적 태도와 그에 선행하는 실천적 자기 반성의 자세를 수용·구비하여야 한다. 변증법과 유물론의 질적 통합, 곧 인간과 사회·역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원리 체계는 정당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한편 구체적 현실의 파악을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정보의 취합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들 두 가지 방법적 태도는 실상 통일된 하나의 과정을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일반 원리의 정향에 따라 구체적 현

실 상황을 분석하고, 누적된 현실 분석을 실천에 적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론을 평가하며 실천 성과를 이론에 재수용함으로써, 특히 성공적인 역사적 실천을 통해 검증된 구체성을 보탬으로써 일반 원리 자세를 풍부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일반 원리와 구체 분석의 끊임 없는 변증법적 상호 역동의 과정 속에서만 사상 이론과 변혁 실천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철학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다. '5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모든 분과 학문의 방법학적 원리로 침투해 있는 앵글

로 색슨 계통의 경험분석적 철학에 담긴, 따라서 현 단계 한국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無批判的 沒價値性의 이데올로기를 打破하는 일은 모든 학문 영역에 부과된 일차적 과업이다. 이러한 실천적 반성의 터전 위에서만 진정한 실천적 비판의 체계는 건설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실천적 비판의 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이들 방법적 태도 및 실천적 자기 반성의 자세는 대학교육이 '90년대 사회 발전을 따라갈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촉진·추동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다. *